

# 중앙공원 1지구 '마지막 행정 관문' 도시계획위 심의 속도

### 오늘 사업계획 변경·토지보상비 등 적정여부... 유튜브 생중계 통과하면 시·사업자 최종 분양가 등 협약 후 선분양 절차 돌입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자인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이 사실상 마지막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밟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풍양저수지 수질개선 주민협의체 합의사항 등 각종 영향평가 심의 반영 사항과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타당성 검증 결과를 토대로 한 사업계획 변경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변경된 사업 규모는 총사업비 2조 6788억원, 3.3㎡(평)당 평균 분양가 2425만원, 기부채납액 7624억원(총수입 대비 27.3%) 등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9개 공원, 10개 사업 지구 가운데 뛰어난 입지와 넓은 면적으로 가장 큰 관심이 쏠린 중앙공원 1지구 개발 계획을 확정 짓는 사실상 마지막 행정절차다.

광주시는 중앙공원1지구 사업의 '신속·투명·공개 원칙'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헬로광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18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전문가 검증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 검증위원들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증내용 중 ▲토지보상비 적정성 ▲공사비·조사설계비 적정성 ▲부대비·제세공과금 적정성 ▲금융비용 적정성 등을 검증한 결과, 총 7명의 검증위원 중 6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는 앞서 지난 18일 공원, 건축, 토목, 회계, 금융, 도시계획,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검증결과를 재검증하는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전문가 검증회의'를 개최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전문가 검증 회의에선 ▲토지보상비 적정성 ▲공사비·조사설계비 적정성 ▲부

대비·제세공과금 적정성 ▲금융비용 적정성 등을 검증했으며, 총 7명의 검증위원 중 6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수의 위원은 광주시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또 지난달 27일 아파트 선·후분양 타당성 검토 중간보고 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추가로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

전문가 검증회의까지 거친 이번 안전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공동 시행자인 광주시와 빛고를 중앙공원개발은 기존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새로운 협약에선 기부채납 규모와 최종 분양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광주시와 빛고를 중앙공원개발이 아파트 분

양가 상한선을 평당 2425만원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최종 분양가는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2027년 준공 목표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 5027㎡ 부지 내에 공원시설과 비공공 시설을 건축하는 광주 최대 도심 공원 조성 프로젝트다. 뛰어난 풍경을 품고 있는 풍암호수를 중심으로 어울림 숲과 청년의 숲, 치유의 숲, 우뚝지 숲, 예향의 숲, 가족의 숲, 활력의 숲, 기록의 숲 등 8개 테마별 도심 숲 공원을 조성한다. 비공공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 규모의 명품 아파트 브랜드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들어선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나비야 훨훨 날아라”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성공기원 나비날리기가 20일 함평 엑스포공원 수생식물관에서 열렸다. 어린이들이 나비를 날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도의회, 전남연구원장 선임 과정 놓고 행정사무조사 추진

입시이사회 부결 과정 적절성 검증도

전남도의회가 전남연구원장 선임 과정에 따른 의혹을 제기하며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독립적 출연기관의 채용 업무 행위까지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지만, 도의회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 과정의 의혹을 살피는 것은 의회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를 열고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 과정에 따른 현황보고'를 청취한 뒤 연구원장 공모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들어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한 안건을 발의하기로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43조 2항) 등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자체 사무 전반에 대해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차이가 있다.

조사 여부는 안건이 발의된 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된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만큼 다른 사무를 추가로 조사할 수 없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2010년 F1(포물러원) 국제자동차대회에 대한 조사 이후 처음이다.

도의회는 최근 진행된 전남연구원장 선정과 관련 ▲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규정에 없는 부적격기준 마련 및 직무를 벗어난 단독후보 추천 ▲기준 점수 이하로 평가해 원장 추천을 방해 또는 무

산시키려한 특정 평가자들의 평가담합 의혹 등이 있는데도 집행부의 자료 제출 미흡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어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행정사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또 연구원 원장 최종후보자 선정안에 대한 입시이사회 부결 과정의 적절성도 살펴보고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공할 수도 없고 독립적 기관인 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의 고유한 채용 심사 내용을 전남도가 파악해 제공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강행 방침이 부적절하다는 반응도 흘러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시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44→78개반·최대 60시간 이용 가능

광주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내고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44개반에서 78개반으로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현재 40개소 44개반을 운영중이며, 올 하반기 34개반을 추가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독립반과 통합반으로 운영하며, 독립반은 반별로 3명까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통합반은 기존 어린이집 반별 정원 내에서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유아로, 독립반은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 통합반은

0-2세 반별 정원 내에서 월 최대 60시간 이용 가능하다. 시간당 보육료는 5000원이며, 국가와 광주시가 3000원을 지원하고 보호자는 나머지 2000원을 부담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는 이용 14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을 통해 또는 전화 신청(1661-9361)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당일 예약은 이용 당일 낮 12시까지 전화 신청만 가능하다.

김선자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돌봄이 필요한 상황 속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운영기관을 확대해 육아 중 겪는 현실적인 육아 돌봄공백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총선 브리핑

### 민형배 “검찰 독재 심판·민생 회복 먼저 나설 것”

민주당 광주 광산을 예비후보

민형배 국회의원(민주·광주 광산)이 20일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민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정상화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며 4·10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저는 광주시민, 광산구민의 정치적 대리인이다”며 “광주 정치인으로서 '민주당 뒤편, 더 세계 제대로 싸워라'라는 명령 실현을 위해 최전선에 섰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검찰 초과 권력을 회수해 검찰 정상화를 완수하겠다”며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지역 검사장 직선제'를 공론화하고 법 외곽죄 도입과 검사 공직 출마 제한으로 검찰에 부여되는 초과 권력을 확실히 없애겠다”고

했다.

그는 또 “광주와 전남의 미래산업 기반 확대를 제1의 지역 과제로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뛰겠다”며 “조 광역 에너지 메가시티를 현실화해 지역 균형발전과 광주·전남 동반 성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 밖에도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시한 불변 최소화 ▲자치분권 확대 과제 앞장 ▲지역 중심 정부 체제 ▲전남대회 핵심 당직 도전 등을 약속했다.

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이 민생 회복의 선결 과제다”며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살려 광주의 봄을 활짝 꽃피우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